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관련 기사 3, 6~7면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3, 6~7면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4면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2면

프랑스 대파업
노동자들이
다양한 운동들을
결속시키다

5면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9면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아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8면

르노삼성 투쟁

12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계속돼 왔다 2019년 8월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기회를 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가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금지 기간을 완화해 줬지만, 자진출국 후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키는 효과가 적었다고 본다. 아마 정부가 미등록 체류 경력이 있는 이주민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그 목적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일정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국이 보장된다고 확인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자진출국 이후 조치들은 공수표나 다름 없다.

정부가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발급해 주겠다는 비자들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거나(단기체류, 어학연수, 기업투자 비자 등) 체류기간이 짧아서(3~5개월 계절근로 비자) 안정적 체류 보장과 거리가 멀다.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데 이미 이 시험에 통과하고도 취업을 기다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고용허가제는 나이 제한(40세 미만)도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5일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서 미등록 체류자 정보를 태국 정부에 제공하기

로 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태국 정부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서(혹은 한국 정부의 압력으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토록 문제 투성이 유인책을 내놓고는 단속을 강화하려고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한 뒤 올해 7월부터 "전국적·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발표해 상반기 중 대규모(규모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랑곳 않는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많은 고용주들이 자신의 부담을 내세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계획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끔찍하게 만들 내용으로 가득하다.

차별과 억압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문제 집단이기는커녕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제조업과 농·어촌의 상당 부분이 이주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도 "현실을 감안해" 고용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을 면제해 주겠다(제조업)거나 고용주와 지자체의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면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겠다(농·어촌)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사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는 피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

용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제도를 이탈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가혹한 처우를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억압해서 얻을 이윤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릴수록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하향 압력을 받는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정당화한다. 완전한 책임 떠넘기기이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은 주로 경기변동과 정부 정책 때문이지(불계이트 노동자 대량해고들 보라) 이주노동자 탓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아예안 국가 출신 미등록 이주민이 너무 많아서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불평한다. 관광 목적의 비자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이주민 수가 늘고 있어 이주민들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을 이용해 자본은 비교적 쉽게 국경을 넘는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반동적 우파 엘리트 정치인인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포함해 각국의 정상들은 환대받았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을 합법화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중동 전체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김종환

중동 전역을 전화에 휩싸이게 할 전쟁이 트럼프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1월 3일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 뒤이어 미국은 이란의 반격에 대비한다며 B-52 전략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중동에 배치했다. 이란도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대응으로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이습여 발을 퍼부었다.

이란과의 전쟁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낳을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인구가 갑절 이상 되고, 지난해 미군 무인기 격추와 8일 이라크 공습에서 보듯 현대식 무기로 무장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자신이 공언한 대로 전쟁을 이란 본토로 확대하면 전쟁은 삼시간에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이란은 본토가 공격당하면 아랍에미리트(UAE, 한국군 아크부대가 주둔하고 전전이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와 이스라엘을 공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란과의 대립을 주도해 왔고, 이란이 공격하면 응전에 나설 것이다.

레바논과 예멘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레바논(한국군 동명부대 주둔)은 대표적인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가 정부

에 참여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여러 번 침공당해 역사적 원한이 쌓여 있다. 예멘(청해부대가 인근 해역에 있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UAE와 이란 사이의 대리전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란과의 전쟁은 그 파장이 워낙 엄청난 까닭에 일각에서는 (“전망”이나 “예상”의 이름으로) 미국과 이란 지배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황 논리 때문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이전까지 전쟁을 꺼리던 지배자들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활적이 될 수 있다.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은 없다”고 공언하던 트럼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만 봐도 미국이나 이란 지배자들의 자제력에 기대를 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이란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란이 미국의 중동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이용해 중동의 강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은 점차 상승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이런 점에서 2015년 핵합의와 비슷한 협상으로 갈등을 조정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2015년 핵합의는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도

중동에서 미국의 위신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란을 회유한 땀칠 처방이었다. 그때도 미국 지배계급의 만만찮은 일부는 격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중국 견제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동에서 패권을 다잡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것은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가 제국주의 경쟁국들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지만 그 지배력을 놓지 않으려 하고 그 틈을 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중동을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고 있다.

결국 미국이 중동에서 모든 주둔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중동 평화의 전제 조건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중동에서 일어난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투쟁이 발전해 자국 지배자들을 타도하고 미군 철수를 강제할 때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제국주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고 미군의 중동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국제 반전 운동은 이라크 등지에서 저항을 고무했고 미국의 군대 동원 능력을 제약했다. 이런 국제적 연대는 지난 몇 달 동안 잠재력을 입증한 중동 대중의 저항을 더 고무할 것이다.

1월 4일 하루에만 미국 수도 워싱턴, 뉴욕, 시애틀, 시카고, 덴버,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의 도시 70여 곳에서 이란과의 전쟁 반대 시위가 열렸다. 영국 런던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도 각각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막고 이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들



자료 출처: 유엔, 세계은행, 워싱턴이치, 미국 통계청, 브라운대학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이현주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초기 미국은 소련에 맞서 서유럽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려고 마셜플랜, 나토 창설, 미군 기지 건설 등 엄청난 물자를 유럽에 투여해야 했다.

또 미국은 다른 주유 자본주의 나라들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줘야 했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들에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 줬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보장받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 속



2019년 12월 17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에 미국이 압도적 경제력을 갖춘 상황에서는 이는 감수할 만한 비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그때에 비해 하락하면서 기존에 미국이 해오던 방식은 커다란 부담으로 작

용했다. 1980년대에 이르자 미국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에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이 보기에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냉전기 동안 경제적으로 훌쩍 성장했으므로 비용 분담은 마땅한 것이었다.

1차 걸프전에서 미국은 전과 달리, 주요 동맹국들에게 군대도 보내고 비용도 내라고 압박했다.

미국 의회는 '1989 회계연도 국방부 지출법'에 "나토, 일본, 한국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가 [미국의 방위비와 비교해] 균형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것도 바로 1991년이다.

그런데 미국의 처지는 지난 30년간 갈수록 악화해 왔다.

수천조 원을 쏟아부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실패했고, 앞친데 덮친 격으로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미국의 위신은 전보다 더 떨어졌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비용 부담 압박을 거세게 하는 데는 이런 맥락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질서를 뒷받침하는 데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이현주

이 글은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보는 연재의 두번째 편으로 냉전 해체 이후의 한미동맹을 다룬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흉악한 짓을 벌였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최후의 승자가 됐지만, 승리에도 출혈이 따랐다. 서방 진영에서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큰 형님' 노릇을 하느라 미국은 돈도 힘도 많이 써야 했다.

그 결과 냉전이 끝났을 시점에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반대로 냉전기 동안 경쟁국들(특히 독일과 일본)은 '큰 형님'이 제공해 온 안보 우산 덕분에 경제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다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다른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지도를 따를지 미국은 확신할 수 없었다.

미국 제국주의에는 새로운 패권 전략이 필요했다.

그 전략이란 세계 최강의 군사력에 의존해 경제의 상대적 위상 하락을 만회하고 경쟁국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력은 예전만 못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다른 경쟁국들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할 수준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라크, 이란,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소련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의 적'의 반열에 올렸다.

1990년대 이래 벌어진 전쟁들(1990~1991년 걸프전,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공습,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은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벌인 전쟁이었다.

미국은 이런 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해 세계 지배자들에 세계의 번영과 안전은 결국 미국의 힘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려 했다. 특히 중동은, 중국·러시아·유럽 등 경쟁국들이 석유를 의존하는 곳이다. 이곳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경쟁국들을 단속하는 데서 중요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미국의 구상은 실패로 끝났다. 이라크에서 미국은 수렁에 빠졌고 힘을 과시하기는커녕 미국이 힘에 부친다는 것만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이 과정에서 득을 봤다. 현재 미국은 위신 하락을 만회하고자 안간힘을 쓰며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북한 위협 부풀리기

특히,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데다 세계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확고히 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그렇다.

1990년대 초중반에 미국은 경제가 급성장한 일본이 자국의 충실한 동맹으로 남을지를 불안해 했다.(이후 일본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며 '일본의 위협'은 누그러졌다.) 뿐만 아니라 두 자리

수 성장률로 빠르게 몸집을 키운 중국이 잠재적 경쟁국으로 떠올랐다.(결국 중국이 경제적·지정학적 측면 모두에서 경쟁자로 부상했다.)

이 지역에서 패권 유지를 위한 개입 명분이 바로 북한 '위협'론('악마화')이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을 견제하려면 미국 중심의 협력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미국은 왜곡과 과장으로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위기를 부추겨 왔다. 미사일, 핵개발을 두고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이 반발하면 이를 빌미로 더한층 제재를 강화하고, 모종의 약속을 해 놓고도 이행을 지연시키다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패턴의 반복이었다.

북한 위협 부풀리기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 같은 기존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도움이 됐다.

가령 1998년 미국은 금창리의 "빈터널"에서 핵무기 개발이 이뤄진다고 의혹을 제기해 한반도 긴장을 끌어 올린 뒤, 결국 일본을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에 끌어들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 합의 등 한국의 MD 참여에 급진전을 이뤘다.

오늘날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과 당장 맞짱을 뜰 게 아닌 이상, 북한 때리기는 미국에 여전히 유용하다.(중국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유용하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키우는 주된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미

국에게 있다. 미국 지배자들이 일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은 이유다. 또한 트럼프에 기대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구상도 완전한 몽상인 이유다.

'전략적 유연성'

역대 한국 정부들은 한미군사훈련, 대북제재 동참, 미국 무기 대량 구입 등 미국의 굳건한 파트너 구실을 했다. 문재인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이런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이 변하고, 한국도 경제가 성장하고 위상이 달라짐에 따라 한미동맹의 구실과 활동 범위도 함께 변했다.

새 전략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을 북한 견제에서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바꿔 놓았다. 더 나아가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적 차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군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이 추진됐다.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말이다. 말끝마다 "자주"를 외치던 노무현 정부는 실천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적극 협조했다.

미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작업한 결과, 한국은 야금야금 미국의 MD(미사일방어시스템)에도 참여 수준을 높여 왔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MD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도 강화됐다.

그러나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전

략은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대응을 부르며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긴장과 갈등을 갈수록 첨예하게 만들어 왔다.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동맹들이 더 커다란 구실을 하길 바랐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범위로 세계 무대로 넓어졌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초로 1991년 걸프전에 파병했다. 그 후 유엔 평화유지군(PKO) 등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2001~2007년과 2010~2014년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2003~2008년 이라크 파병으로 한국은 중동 민중을 학살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한 미국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했다. 지금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아덴만에 한국 군대가 파병돼 있다.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미국 패권에 편승해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득을 취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부차화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이 모순이 지금의 안보 위기의 핵심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미동맹 의존은 다르지 않았다. 다음 연재 기사에서는 민주당 정부와 한미동맹에 대해 다룰 것이다.

추천 책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하영, 김영익 외.
책갈피



프랑스 대파업

노동자들이 다양한 운동들을 결속시키다

찰리 킴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맞선 집중 행동의 날이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또 다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1월 11일에도 전국적인 시위가 잡혀 있다.

국영철도공사(SNCF)와 파리교통공단(RATP) 노동자들은 12월 5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은 1986년 말부터 1987년 초 28일 동안 벌어진 철도 파업, 1995년 당시 우파 총리 알랭 쥐페의 연금 삭감을 철회시켰던 철도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때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철도 절반가량이 운행 취소됐으며, 파리 지하철은 대부분 운행이 중단됐다. 버스 운행 또한 매우 줄었다.

프랑스 정부는 [파업으로 사실상 마비된] 교통을 복구하려고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하고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



사진 출처 O Phil des Contraires

파업 한 달을 넘어서다 파업 대열이 2019년 12월 27일 파리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지 않았다. 투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운동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1월 3일 [16개 직종 노동자 · 자영업자 조합들이 결성한 연금 방에 연대체 ‘SOS 연금’은 회원 70만 명이 9일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총동맹(CGT) 소속 철도노조의 한 현장대표인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파업을

접지 않은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주머니가 가벼워 힘들긴 하지만 연대 덕분에, 그리고 이번 싸움에서 지면 영국 철도처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에 우리는 일손을 놓고 그저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란 조끼 운동, 기후 위기 반대 활동가들, 그 외에도 여러 운동들과 어떻게 연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운 동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정치가 노동조합 운동을 넘어서고 있어요.”

봉쇄

노동총동맹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자유 공장을 완전히 봉쇄하자고 촉구했다. 그렇게 되면 주유소들의 유류 부족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전력 공급은 끊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 요금 부담은 덜어주고 있다.

노동총동맹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게시했다. “CGT 소속 전력 노동자들은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력 공급을 재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마크롱은 여전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아가라’는 연금 공격의 핵심 사항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운동의 분열을 노리고 1975년생 이후부터 바뀐 연금제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이것이 분열을 노린 것이며, 공격을 확대하기 위한 서막이고, 젊은 세대를 버리는 것임을 꿰뚫어 봤다.

전국자율노조연맹(UNSA) 지도부는 산하 철도 노동자들에게 연말연시에는 작업장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4개 지부가 지시를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했다.

다른 노총들은 파업 유지를 지지했지만, 대부분 무기한 파업을 분명하게 호소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무기한 총파업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조합 기층에서는 서로 다른 노총이나 부문의 노동자들이 파업 유지 · 건설하기 위해 한데 모이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 진행 중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86호 / 번역 김지혜

1월 2일자 기사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

기후 변화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사라 베이츠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을 강타하며 “종말론적” 풍경이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시드니, 멜버른 등 대표 도시들이 속한] 뉴사우스웨일스 · 빅토리아 두 주(州) 전역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 대피 작전이 벌어져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피신했다.

12월 31일 빅토리아 해안 도시 말라쿠틀아에서는 주민과 발이 묶인 관광객 약 4000명에게 해변으로 피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그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바다로 뛰어들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1월 3일에 그중 약 1000명이 해군 함정을 타고 대피했다.

몇 달 동안 전례 없는 산불로 적어도 2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만 산불이 약 200건 발생했고, 다른 주들도 진화에 애쓰고 있다. 여러 불길이가 한데 합쳐지면서 화마가 커지기도 한다.

빅토리아주 소방청장 스티브 워링턴은 화재 피해가 극심한 다수 지역에 소방관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몇몇 지역들에는 소방차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웨일스 전체 면적의 3배(서울 면적의 100배)에 가까운 600만 헥타르가 전소했으며 건물은 적어도 1200채가 불탔다고 추정된다. 몇몇 소도시는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

이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1월 4일에도 날씨는 “극심한 대규모 화재가 벌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이 기사는 1월 3일에 쓰였다].

서울 면적 100배 전소

1월 3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7일에 걸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소방대의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불길이가 잡히는 데에 최대 2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내다 본다.

수도 캔버라는 대기오염 수준이 ‘유해’ 기준치보다 21배나 높다. 연기는 뉴질랜드 남섬 대부분을 뒤덮을 만큼 멀리까지 퍼졌다.

당국은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때 알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도움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방청 부청장 롭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계속 남았다면 그건 본인들 책임입니다.”

“신고를 해도 소방차가 바로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한동안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피해야겠다는 마음을 너무 늦게 먹는 것만큼 나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 식수 고갈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해변이나 전소된 구역에 있는 대피소로 내몰린 사람들도 있다.

여러 도시들에서 식수가 고갈됐고, 수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시드니 교외 도시 벨모럴의 소방청장 브렌던 오코너는 이번 화재를 “생지옥”이라고 묘사했다.

“사방이 온통 불타고 있었습니다. [반면 화재를 진압할] 우리 자원은 너무 부족했어요. 추가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사방이 불길이라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자체가 쉽지 않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주유소는 기름이 없기 일쑤다. 도로가 봉쇄되거나 쪼개진 나무와 내려앉은 송전선 따위 잔해로 뒤덮히는 등 길이 협해져 탈출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최소한 동물 5억 마리가 화재로 죽

산불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산불은 기후위기가급격히진행된 결과다.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이 기록적인 고온과 오랜 가뭄에 시달린 탓에 산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빈번하고 심각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몇 년이나 계속돼 불길이가 더 쉽게 번지고 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만의 일이 아니다. 201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었고,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은 이윤 추구 때문에 발생한 산불로 휩싸였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진화도 더 어렵다. 원래 지역소방청은 산불이 통제를 벗어나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방 인력의 통제 하에 야생 관목과

어, 멸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화재가 커지면서 집권당인 보수 자유당에 대한 분노도 타오르고 있다. 총리 스콧 모리슨은 화재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뉴사우스웨일스의 소도시 코르바고에 방문했다가 빗발치는 야유를 피해 도망쳤다.

코르바고의 한 주민은 총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총리는 멍청해요, 정말 멍청해요.

“사람들이 죽는데 어쩔 건가요?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은 또 어쩔 건가요?”

모리슨은 산불이 거세질 때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가 대중의 분노가 확산된 후에야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왔다.

정부의 생존자 지원 대책은 개탄스럽다.

정부는 화재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들에게 성인 1인당 531파운드(한화로 82만 원), 어린이 1인당 212파운드(한화로 33만 원)를 한 번 지급하겠다는 쥐꼬리만한 구제책을 내놓았다.

모리슨 정부의 보잘것없는 대책은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 비상사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모리슨의 시간은 끝났다. 기후 위기에 맞서고, 이를 야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전투다.

주에 대규모 탄광 개발을 허가했다.

여기서 카마이클 탄광을 신축 중인 [인도 최대 광산업체] 아다니는 이 지역의 연간 석탄 채광량이 6000만 톤에 이를 것이라 기대하며, 탄광을 추가로 6곳 더 신축하기를 바란다.

현 정부는 2019년 1월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아다니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행태는 정치인과 석유 · 가스 기업들이 자본주의의 화석연료 중독을 줄일 마음이 없고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저지하려면 대단히 위협적인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86호 / 번역 오선희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문재인 정부에 제차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건설돼야 한다.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어떤 곳인가?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관문으로 세계 해상 석유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다.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이곳을 지난다. 인근에는 세계적 금융 허브로 부상한 걸프 연안 국가들이 있다. 그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거론한 바 있다.

호르무즈해협 긴장 고조의 주범은?

미국에 주된 책임이 있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으로 파기하고,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했다.



AFP

지난해 12월 13일 훈련을 벌이고 있는 청해부대원들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틀어막아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였다. 이란 근처에 함대를 추가 배치하고 군사 훈련도 벌였다.

미국의 이런 압박 속에서 지난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이 의문의 공격을 당했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유조선이 억류되기도 하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등 충돌이 반복됐다. 이는 트럼프의 이란 본토 폭격 계획(다행히 실행 직전에 취소됐다),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시설 공격 등 더 큰 충돌로 발전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파병에 대해 계속 보도해 왔다. 해군은 아덴만에 파견되는 왕건함 선원들에게 “작전 구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런 상황들

을 보전대 문재인 정부는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발표할 타이밍을 재고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정부 내에서 파병 주장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파병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 정서적 부담이 될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도 대중적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것을 계기로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의 중동 장악력이 약해졌고, 이란은 당시 이라크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파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왜 파병 요구에 응하려 하는가?

단지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과 제국주의 질서 내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지배체급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평화 염원보다는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하는 행보를 밟아 왔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초부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2018년 한반도에서 국적으로 유화 국면이 시작된 후에도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은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미국 산 첨단 무기도 대거 구입했다.

최근 급격히 중동 정세가 악화된 가운데에서도 일본 총리 아베는 예정대로 파병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도 뒤처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대가로 미국에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을까?

문재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게서 파병으로 기여를 인정받고 양보를 얻어 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해 왔고, 그래서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한국과의 협상이 일본이나 나토(NATO) 같은 다른 동맹들과의 협상에 줄 영향을 의식할 것이다.

파병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리는 북·미 관계가 다시 냉랭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할 때 써먹은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한 후에도 북한을 계속 압박했다. 결국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에도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와 관계없이 — 아니, 오히려 그에 더 고무돼 —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아시아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동 대중을 화성시켜 한반도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족이기주의적이다. 이는 당사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행태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왜 한반도 평화에 해로운가?

현재 미국은 위협천만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사실, 작전까지도 미국은 중동 개입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특히, 미국이 남긴 공백을 러시아와 중국이 이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증대시켜 왔다.

만약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란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면, 더 기세등등하게 중국을 상대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긴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이런 더 큰 지정학적 질서의 종속변수다.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한국 상선을 한국군이 보호해야 하지 않나?

일단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어 미국의 이란 공격에 가세하는 것은 긴장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할 때 써먹은 논리이기도 하다.

1월 8일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는 우방도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란이 후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가 선박의 국적을 확인하고는 풀어 준 적이 있다. 한국이 파병을 한다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때는 그냥 “다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연합 함대에 연락 장교나 비전투 병력만 보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병력들도 엄연히 군대이고 미국



의 작전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행위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베트남전 때도 미국은 “많은 국가” 정책을 펼치며 그런 효과를 노렸다. 당시 병력을 보낸 국가는 5개뿐이었지만, 그 외에도 수십여 개국을 끌어모아 전쟁을 정당화하고 지원을 받았다.

미국 주도 함대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나, 호르무즈해협이 아닌 오만해 등지로 파병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곳에 외국 군함이 와서 배치된 군사력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도 결국 이란을 압박하고 미국을 돕는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영국이 미국 주도 연합 함대와 선을 그으며, 유럽연합 주도 함대를 꾸려서 상선을 보호하자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제안했을 때도 이란은 반발했을 노였다. 당시 병력을 보낸 국가는 5개뿐이었지만, 그 외에도 수십여 개국을 끌어모아 전쟁을 정당화하고 지원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 군사력을 보내거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세를 돕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지금부터 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논란을 피하려고 보수를 피고 있다. 이미 아덴만으로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이완

미국의 개입은 중동의 민중 운동을 좌절시킨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거센 솔레이마니 암살이 이란·이라크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폼페이는 암살 몇 시간 후 자기 트위터에 출처 불명의 동영상 게시하며 이런 설명을 붙였다. “이라크인들이 자유에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춘다.”

물론 솔레이마니는 사회혁명가가 아니었다. 최근에 솔레이마니는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이었던 솔레이마니는 시리아 혁명에 대한 군사 개입을 주도해 아사드 독재 정권을 위기에서 구출해 왔다. 또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공화국’(ISIS, 이하 아시사)에 맞선 군사 작전을 지휘하며 이라크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골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솔레이마니가 잔혹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중동 패권을 지키려고 솔레이마니를 죽였다.

미국은 이란과 중동의 민주주의와 해방, 평등을 텅판만큼도 관심이 없다. 미국은 이란인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반세기 넘게 방해했다. 195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모사데크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했다. 이후 들어선 친미 사왕조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타도되자, 미국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지원해 8년간 이란과 전쟁을 벌이게 했다(이란·이라크 전쟁). 그때 이란인 30만 명이 죽었다.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중동을 피로 물들였고, 점령을 유지하기 위해 종파 갈등을 조장하고, 중동 대중의 저항을 방해했다.

뒤를기

지난해 말, 아래로부터 저항이 다시금 중동 정치의 주요 변수가 됐다. 미국의 개입은 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대규모 항쟁이 이라크와 이란을 뒤흔들었다. 이라크에서는 친이란계 정치인들의 부패가 대중 저항을 촉발했다. 이라크 민중은 미국이 조장해 온 종파 갈등을 뛰어넘어 단결해 총리 아물 압둘 마흐디를 끌어내렸고, 그후에도 부패한 정권을 맞서 계속 저항했다. 결국 대통령 바흐라니 살라흐도 솔레이마니 암살 직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란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휘발유 가격 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분노한 민중이 대중 항쟁을 벌였다. 특히, 트럼프가 부활시킨 제재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1000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그래도 소요는 멈추지 않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막대한 응징”을 올려대며 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은 그러한 대중 저항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에 맞서 알리 하메네이 정부를 우선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메네이 정부가 솔레이마니를 반제국주의 투사로 부각시키는 데에는 미국에 맞서 온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중 저항을 진압·무마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개입은 대중의 진정한 염원을 엉뚱한 방향으로 튕긴다. 이라크 항쟁 조직자 한 명은 <가디언>에 이렇게 전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은 여러모로 최악이었습니다. 이란 정부 지지자들은 ‘이란 정부에 반대하면 미국의 폭두각시라며 적회를 공격합니다. 지배자들이 전쟁을 이용해 우리 운동을 분쇄할까 두렵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반정부 항쟁에 참가했던 평범한 이란인·이라크인들이 입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중동 대중의 삶과 항쟁 모두에 비극과 절망만을 낳았고 앞으로도 낳을 것이다.

진정한 해방은 제국주의와 현지 자본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이란과 중동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인 행동으로만 가능하다. 2011년 아랍 혁명 당시 강력한 대중 항쟁은 진정한 해방의 가능성을 잃고 보여 줬다. 그러나 그때도 제국주의의 리비아·시리아 간섭은 대중 운동의 염원을 뒤흔고 좌절시켰다.

트럼프의 전쟁과 자국 사용자들의 착취, 모두에 저항할 노동자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저항이아랍로 중동 민중을 해방시킬 수 있다.

닉 클리크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604호 / 번역 김중환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정진희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핵심 이유로 꼽힌다.

오늘날 여성들은 대개 출산 뒤에도 유급노동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믿을 만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 아이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그런 압력이 커진다.

양육이 개별 가정에 맡겨진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이 아이를 돌보게끔 하는 사회적 압력이 크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운운하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노동계급 공격을 펼쳐서 이런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여성의 고용률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양육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경력단절’ 상태였고, 주요인은 ‘육아’였다(여기서 육아는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뜻한다).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답한 여성은 2016년 대비 8.1퍼센트포인트나 늘어났고 매년 증가 추세다.

해고나 승진 기회 박탈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2018년 만 0~8세 자녀를 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퍼센트에 그쳤다. (여성은 11.9퍼센트, 남성은 1.2퍼센트).

시간제 일자리

지난해 10월 통계청은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고령자와 여성 중심으로 시간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8월 시간제 일자리의 73퍼센트가 여성(231만 명)으로, 전년보다 17.1퍼센트나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나 경력 상승 기회가 가로막혀 있다. 지난해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3.3퍼센트에 그쳤다(《시간제 일자리 여성에게 선택인가? 강요인가?》, 전국여성노조 주최 토론회 자료집)

일자리가 열악하기에 여성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다.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일자리가 그것밖에 없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저임금과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 간병, 요양 등 갈수록 늘어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 위탁해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대거 늘리고 있다. 노동계급과 서민을 위한 복지에는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이윤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된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배신에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싸우고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학교·병원·톨게이트 등지에서 일하는



정진희

정부의 무성한 성평등 연사가 무색한 워킹맘 현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지난해 곳곳에서 투쟁을 벌였고, 최근 몇 년 새 남성보다 여성의 노조 가입 증가율이 더 높다.

여성 노동자의 여전한 이중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기 위해 여성·남성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더 성장해야 한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양효영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이 말 자체도 과장이지만, 늘어난 일자리 중 비정규직이 많다.

몇 달 전 통계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748만 명이라고 발표했다(2019년 8월 기준). 이는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증가한 수치였다. 통계청은 집계 방식의 변화 때문에 새롭게 통계에 포함된 비정규직 부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그것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최소 36만 7000명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도”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이 통계로도 드러난 셈이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기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고 노동시간 쪼개기, 초단시간 근로를 확대해서 오히려 월 임금 인상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와 월 임금 격차 확대로 저임금 계층이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약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악을 하려 한다.

한편, 보수 언론들은 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려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매일경제》)고 주장한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미래도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를 진지하게 추구하려면 이런 이윤 논리에 정면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정반대로 ‘돈 안 드는 정규직화’를 제시하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을 배신하고, 시간제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

비용 절감

한국에서는 특히 1997년 IMF를 불러들인 경제 위기로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됐다. 기업주들은 이윤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늘려 왔다.

비정규직이란 고용 기간이 한시적이거나(기간제 등), 고용 형태가 간접 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이나 특수고용이거나, 전일제가 아니라 파트타임인(시간제 등) 일자리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노동자들은 고용, 임금, 노동조건, 각종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IMF 경제공황 당시 기업주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와 조기 퇴직 압박으로 인력을 감축했다. 동시에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외주화를 늘렸다.

그 뒤로 실업률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얻게 된 일자리는 훨씬 불안정하고 저임금이었다.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늘었고,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외주화되거나 간접고용으로 밀려났다. 직접고용 또는 정규직이었던 화물차·건설기계 노동자, 보험모집인 등은 자영업자로 둔갑했다.

비정규직 확대는 경제 위기 시기에 떨어진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복지 혜택,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비정규직 확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도 용이하다. 파견·용역의 경우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수고용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정을 기피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활용해 경기 위축 때 인력 규모를 상대적으로 쉽게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1987년 이래로 강력해진 노동조합의 저항을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반대로 이는 기존 노동조합들이 외주화 등 비정규직 확대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연대해 투쟁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다.

단결·투쟁의 잠재력

정부와 사용자들은 차별받는 집단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단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사내하청과 정규직 등으로 말이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고용 불안과 임금 하향 압력을 부추겨서 정규직들이 조건 개선에 쉽게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 심해질수록 사용자에게 맞설 단결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한 작업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서로의 투쟁에 대해 대체인력 투입 등 파업 파괴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일각의 주장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어느 한 쪽의 조건 악화는 다른 한 쪽의 조건 악화로 이어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 중요한 이유다.

비정규직이 크게 확대되자, 일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일회용’이 됐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특히, 최근 플랫폼 노동에 대해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많다. 이런 주장들은 심각한 불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싸우기 힘들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단기 비정규직을 무한정 늘리

기는 어려움이 있다.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들에게 인건비 감축과 책임 회피 등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잦은 이직은 사용자에게 골칫거리다.

사용자들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이 대거 늘어난 시기에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은 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장기간 일해 온 노동자도 적지 않다. 불안정성이 크다는 시간제 중에도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자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에서 사용자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이는 비정규직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확대돼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많이 벌어졌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조직되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섰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잠재력이 있음을 거듭 보여 줬다.

이 글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김하영 지음, 책갈피)을 많이 참고해서 썼다.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택시업계와 ‘타다’가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 ‘타다’가 ‘공유 경제’를 표방하지만 실은 법인 프리미엄 택시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두 업종의 갈등은 정치권·언론계·재계로도 번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 법안 처리에 최종 찬성했다. 요란하게 ‘제4차 산업혁명’을 외치던 정부가 택시업계를 편든 것이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타다’ 대표들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박영선은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라고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 내 대체는 아닌 듯하다.

민주당도 선거를 의식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틀쫓는 택시 민심을 자극해 선거에서 득 불 일 없다.” 전국적으로 25만여 명에 이르는 택시 기사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선거구는 서울 중랑을인데 택시 차고지가 아주 많은 곳이다.

한국당도 법안에 찬성했다. 한국당은 이미 ‘택시 VS 카카오’ 대립에서도 택시업계를 편든 적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타다 금지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의원들이



타다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의 단결과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 이익집단 반발만 피해 금배지나 한번 더 달려고 한다.” 시장주의적 우파 끼리도 타다 규제를 놓고 입장이 갈린 것이다.

‘타다’를 비롯한 스타트업 기업 자본가들은 정부 규제에 크게 반발한다. 쏘카(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 대표 이재웅은 이렇게 반발했다. “[‘타다 금지법’]이 150년 전 붉은 깃발 법^{*}과 뭐가 다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도 규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실, 현대자동차·SK·네이버 등 주요 모빌리티 관련 자본가들은 세계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이미 2~3년 전부터 해외 차량 공유 업체에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있다.

계급 문제

‘타다 금지법’ 논란의 본질은 이렇듯 여객 운송 시장 지분을 둘러싸고 지배자들이 분열해 싸운다는 점이다.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착취 전리품 쟁투에서 노동자들이 어느 한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무역(가령 수입·수출 규제)과 자유무역(시장 개방) 사이에서 노동자들이 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지배계급이 아닌 계급들도 ‘타다’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중간계급)

이 ‘타다’를 맹렬하게 반대한다. 경제 위기로 이미 진행되던 몰락이 플랫폼 산업의 확산으로 인해 가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에는 서로 다른 세 계급이 존재한다. 법인택시 사장(자본가), 개인택시 기사(중간계급), 법인택시 기사(노동계급). 그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타다 금지법’은 택시 자본가와 개인택시 기사(중간계급)들의 승객 유치 경쟁에 승통을 띄워 주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 노동자들은 ‘타다 금지법’으로 얻을 이득이 없다. 지난해 ‘택시 VS 카카오’ 대립 때를 살펴보자.

당시 일부 택시 노동조합들(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은 택시 자본가와 개인택시 기사를 편들며 함께 싸웠다. 그러나 택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별로 없었다. 택시 노동자들은 최저 악화를 우려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는 사납금(社納金) 제도 폐지와 완전 월급제에 있었다.

사납금은 회사에 바치는 돈이다. 택시 노동자는 차량을 대여하는 대가로 택시 회사에 하루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그 외 수입을 임금으로 가져간다. 사납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결근하면 기본급에서 공제하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은 장시간·휴일 운행과 저임금으로 내몰린다.

반면, 택시 자본가들은 사납금 제도 폐지에 강경하게 반대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그랬듯이) 여당인 민주당은 택시 자본가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단계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월급제를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고, 나머지 시도는 국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5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택시 자본가들의 전

투에 대거 참전했지만 포상은 (나중에 부도수표가 될 수도 있는) 어음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택시 노동자들은 택시 자본가로부터 독립해 또 그들에 맞서 자신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싸워야 한다.

게다가 택시 노동자들이 ‘타다 금지법’을 지지하면 ‘타다’ 노동자들과 착지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타다’에는 1만 1000명이 넘는 운전 노동자들이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노동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타다’ 운전 노동자들은 유급 휴식도 없고, 4대 보험·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들과 비슷한 처지였던 영국의 우버 택시 노동자들은 2016년, 투쟁을 통해 우버 고용 인정, 유급휴가, 병가, 최저임금을 따냈다.

우리는 택시업계와 ‘타다’의 “상생”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두 업계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단결과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김인식

Q 용어 설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타다 금지법’은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붉은 깃발 법

1865년 영국에서 마차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도심 최고 속도를 시속 3킬로미터로 제한하고,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의 55미터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던 제도였다.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서울지하철 승무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기관사·차장) 노동시간을 지난 11월 16일부터 일방적으로 연장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승무원 운전 시간을 하루 평균 12분 늘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열차 운행계획(열차 운행 시각과 간격)에 따라 배치되는 승무원들의 근무 특성상, 일부 노동자들은 연속 운전 시간이 30분 이상이 증가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승무 노동자들은 켜켜한 지하터널을 하루 5시간 가까이 다니며,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2분 간격으로 역마다 정차를 반복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는 등의 일을 한다. 운전하는 동안 생리현상도 참아야 하고 제때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다.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번 운전 시간 연장 조치로 더욱 악화됐다. 운전 시간 연장 이후 기관사 2명이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이 부족하다며 2호선 운행 횟수를 줄였다. 이 조치도 승무원들의 운전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더 많은 승객이 승·하차를 하게 되면서 정차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열차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호선의 경우, 열차의 최종역 도착 시각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번 노동시간 연장 전에도 서울지하철 승무원들은 극심한 인력 부족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휴일 근무를 강요당했다. 서울시최적근무위원회

도 통상근무자의 휴일이 연간 115.7일인데 비해 승무원은 96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 5~8호선의 1인 승무는 연이은 기관사 자살(9명)의 주요 원인이었다.

승무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으로 내몰리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

적자 책임 전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공기업으로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시간 연장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무임 승차가 늘는 등 공공서비스에서 생긴 적자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를 보면, 지난해 합의한 인력 증원(승무원 209명 총원)을 이행할지도 의심스럽다. 이번 노동시간 연장 조치가 100명가량의 인력 증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말이다.

서울시와 사측이 예정된 인력 증원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연장에 반발하는 것은 정당하다.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노동조건이 개악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 자체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승무 노동자들은 20일 넘게 서울시청 앞 노숙 농성을 하며 해결을 요구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쌀쌀맞게 외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개악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행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승무본부의 한 간부는 실질적인 지하철 운행 중단 효과를 내는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투쟁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악을 막는 데 꽤 중요한 투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기술직종(궤도와 건축)에 야간 노동을 늘리는 근무형태 개악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인력 충원 없는 4조2교대제 시행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니 말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진 만큼, 노동자들이 투쟁을 확대해 간다면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정환

대우조선해양 희망퇴직 매각 앞두고 벌이는 노동자 공격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12월 31일부터 1월 13일까지 정년이 10년 미만으로 남은 고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정규직 인력 2000여 명이 줄었다. 2016년에도 ‘희망퇴직’ 공격이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됐고, 임금 삭감, 외주화 등으로 조건이 악화됐다. 그런데 사측은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이성근 사장은 신년사에서 “극한의 생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정당화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수주 목표를 약 73퍼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 환경규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선박 교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많았지만, 경기 후퇴로 선박 교체 수요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더 깊어지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불확실성은 대우조선 사측에게도 골칫거리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전초전

이 같은 구조조정은 대우조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령,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1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3년 연속 이어진 공격이다.

대우조선의 현장 노동자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고 한다. 2016년보다 퇴직금이 좀 더 많이 제시돼서 소수 노동자들이 응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우조선은 올해 매각을 앞두

고 있어 이번 감원이 주는 신호는 남다르다. 지난해 대우조선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업계에서는 매각 전이라도 인력 감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한 현대중공업 사측은 인수합병 이후 몸집을 줄일 것(설비와 인력 감축)이라고 공언한 바도 있다.

이번 ‘희망퇴직’ 공격은 매각 전후로 벌어질 구조조정의 전초전일 수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희망퇴직’이 공고되자마자 사측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출퇴근 홍보전, 본관 앞 집회와 농성 등을 벌이며 투쟁하고 있다.

투쟁을 유지·확대해 사측의 노동자 압박을 무력화해야 한다.



김지태 1월 6일 희망퇴직을 거부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노동자들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난 12월 5일 교육부 의회를 받아 이영희 단국대(교육대학원) 교수팀이 작성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했다.

기존 교원평가는 두 종류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와 동료 교사들 간 다면평가를 합쳐 산출하며 승진과 인사전보(전근) 기준으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교원성과급 기준과 일부 연동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흔히 거론되는 교원평가로 수업,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다. 성적이 낮으면 강제 연수(60시간~6개월간)를 받아야 한다.

이영희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임금 등에서 차별을 두려고 한다.

또 계속 낙제점을 받는 ‘부적격 교사’를 해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로운 교원평가에서 5차례 낙제하면 직권면직(해고) 혹은 퇴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전까지 타 지역 전근과 장기 연수, 6개월 무급 휴직, 호봉 승급 제한이 가능하다. 현행 교원평가 결과로 최대 6개월의 장기 연수를 받는 것과 비교해 심각한 개악이다.

퇴출 위협으로 교사 통제 강화, 임금 개악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의 핵심은 교원평가 결과와 승진, 인사전보, 임금이 모두 연동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를 경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교사를 공격하면서 교원평가를 성과급·인사와 연동하는 것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선 때에는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라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교원평가와 임금 등을 연계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90.3퍼센트가 바라는 교원평가 폐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기초학력 저하’를 구실 삼아 일제교사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일제교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임금·인사와 연계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더욱더 학생들을 점수 경쟁에 내몰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고통은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영희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 호봉 승급, 징계, 재임용 기준으로 삼는다며 이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교원평가와 임금이 연동된 결과는 교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 드러났다. 영국에서 교사의 임금은 총 9단계로 매년 학교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영국은 학교별로 연봉제를 실시한다). 이때 협상의 기준은 학생 성적을 포함한 교원 평가 결과다. 2019년 발표된 영국 교원노조의 조사를 보면, 교사·교장·직원의 40퍼센트가 5년 이내에 그만두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업무량 과중(62퍼센트)과 학생 성적 책임제(40퍼센트) 때문이었다.

이는 업무량도 늘린다. 영국의 교사들은 수업 준비나 상담 같은 실제 업무

보다 자신의 실적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데 시간을 상당히 쓴다고 한다. 이미 한국 교사들도 성과급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자료 누적에 적잖은 시간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평가와 임금을 연동하려는 시도는 교사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내용으로 비판적 수업을 하는 것은 관리자들에게 (때로는 학생·학부모들에게) 제지된다. 교원평가 강화는 이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교원평가 강화는 학생들도 더 강화된 점수 경쟁으로 고통받게 만든다.

2010년에 실시된 일제교사 때 이를 대비한다며 초등학교생에게 ‘야간자율 학습’을 시킨 학교가 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성적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을 일제교사를 보지 못하게 한 학교가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다. 일제교사와 교원평가, 학교평가가 결합된 미국·영국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종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부적격 교사?

새 교원평가 방안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나 ‘부적격 교사’가 있다며 평가 강화와 교사 퇴출제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개별적인 교사 사례를 부각해 퇴출까지 명시하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과밀 학급, 성적 경쟁, 학생 통제 업무 때문에 압박을 크게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는 엄연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2017년 12월 교육부 앞 교원평가 폐지 전교조 기자회견

전교조의 조사를 보면, 전체 교사의 40퍼센트 가까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중 가장 우울한 집단이 차별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기간제 교사, 성적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고3 담임, 자아를 찾는 학생을 굴복시키라 요구받는 중2 담임이라는 점은 시사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사 총원과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입시 경쟁 완화 공약도 모두 어기고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은 하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의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며 교원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교육 조건을 그대로 두고 교원평가를 강화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심화로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현행 교원평가는 참가율이 저조해

두세 명의 학생만 참여해 낙제점을 줘도 교사가 연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교원평가가 강화되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만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교사 확충, 교사 대상 상담과 양질의 연수 등을 요구해야 한다.

2012년과 2014년에 미국 시카고에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연동하고 근무 연차에 따른 호봉 승급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대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교원평가 개악 시도를 단단히 경계하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전국 대의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임금과 직접고용 위해 파업하다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하고, 그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이다. 소각장 노동자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서울시는 3년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다. 저비용 고수익을 우선시한 서울시의 민간위탁 정책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재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다.

임금 착복과 열악한 노동조건

쓰레기 소각 과정은 매우 위험하다. 노동자들은 약 1100도의 소각로를 운영·관리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방화복은커녕 반팔 티셔츠에 목장갑, 일반 안전모만 쓴 채 일을 해 왔다.

사측은 돈이 든다며 방열복·방화복도 주지 않았다. 그나마 2년 전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54일간 파업을 벌여 승리한 덕분에 일부 안전 장비가 지급됐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눈이 안 보일 정도의 잿가루, 피부를 태우는 양젯물,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일산화탄소 등에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본지 관련 기사: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내 몸에 무슨 독이 쌓이는지를 몰라



1100도 소각로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들”

요, 화상 같은 건 워낙 일상적인 일이 예요. 건강검진 받는 게 진짜 무섭죠.” (12월 26일 서울시청 앞 파업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소뇌 위축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는데, 유해가스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산재 신청은 했지만 입증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성종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조직국장)

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일했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았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 업체인 삼중환경기술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떼먹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책정한 임금 예산은 38억 원이지만, 사측은 30억 원만 지급한 것이다. 심지어 사측은 지난

해 임단협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으며, 임금 8퍼센트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일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또한 18억 원의 파업 손실액을 서울시에 물어줘야 한다며, 파업을 지속하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시민 세금 떼먹고 노동자 피 빨아 먹는” 사측의 뻔뻔한 행태에 치를 떨고 있다.

사측이 이렇게 악행을 일삼고 있지만, 서울시는 ‘회사와 노동자가 알아서 하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

들이 파업을 벌인 지 24일 만에 고작 사측에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형식적인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민간위탁의 민낯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수수방관에 분통을 터트렸다.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위탁 업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입찰가의 약 88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81~84퍼센트의 금액으로 계약한다.

위탁 업체는 입찰 경쟁을 위해 최대한 낮은 낙찰가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것이다. 이처럼 저임금, 임금 착복, 열악한 처우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싸게 부려먹으려는 위탁 업체와 서울시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의 외침은 정당하다.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해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분야에 민간위탁을 확대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교육, 교통 등 154개 시설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분야 회계·집행 기준을 수립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그 후에도 민간위탁의 비리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윤 몰이에 혈안이 된 민간 업체에 공공 업무를 위탁하면 공공서비스 질과 노동 안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안전한 노동 환경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서울시가 비용과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돈을 남기고 있다.

민간위탁의 적폐에 맞서 싸우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 말고 책임지고 해결하라.

나지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투쟁

노동강도 크게 높이는 인력 감축 철회하라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그간 연세대 당국은 정년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해 왔다.

올해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26명의 정년 퇴직자가 생긴다. 하지만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들은 청소 노동자 퇴직자 중 절반만 신규 채용하고, 경비 노동자들은 아예 충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오기 전에 일을 끝마치려고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한다. 새벽 네 시 반에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그런데도 학교 당국은 비용을 줄이려고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전

보다 더 높아졌다. 노동자들이 “더는 [인력을] 줄일 곳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예컨대 다섯 명이 일하던 첨단과학관에서는 이제 세 명이 일하고 있다. 심지어 네 명이 일하던 GS칼텍스 산학협력관은 이제 한 명이 청소해야 한다.

매년 인력 감축에 시달리는 청소 노동자들은 추가 인력 감축으로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질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무악학사(기숙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무악학사는 생활시설인 만큼 노동 강도가 높다. 고령의 청소 노동자들은 어깨나 무릎 수술을 받기도 한다. 최근 이곳에서 청소 용역 회사가 바뀌면서 청소 노동자 빈자리가 하나 생겼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이 자리를 안 채우고 있다.

경비 노동자들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학교 당국은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초소와 건물을 폐쇄하거나 24시간 무인화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CCTV 등을 통한 무인 시스템은 사후 대처만 가능할 뿐이다. 실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은 경비 노동자들이다. 사전 예방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무인화를 도입하겠다는 건물들(연희관, 외솔관, 신학관, 교육과학관)은 시험과 수업이 많아 유동인구도 많다. 따라서 경비 인력 감축은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한편,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 코비 문제도 남아 있다.

코비는 경영관, IBS관, 백양로 지하, 제4공학관의 청소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로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고 괴롭혔다.

지난해 여름 코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사측은 악랄하게 탄압했다. 이에 코비 노동자들은 “악덕 용역업체 코비 퇴출”을 요구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코비를 내보내면서 노동자들까지 해고하려 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코비 노동자들의] 고용을 학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고용승계를 나 몰라라 했다.

코비 노동자들은 해고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코비 노동자 전원은 그들의 바람처럼 전일제 일자리 전환돼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항의

12월 31일 노동자들은 연세대학교 백양관 로비에서 총회를 열고 학교 당국의 인력 감축과 해고 시도를 규탄했다.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 소속 학생 10여 명도 참가해했다.

그런데 총회 직전 학교 당국은 비열하게도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코비 노동자들만 불러서 면담했다. 조합원들과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 것이다.

총회를 마치고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총무처를 찾아가 항의했다. 학교 당국이 무시로 일관하자 노동자들은 총무처 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학교 당국은 코비와의 계약을 일단 3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노동자

들을 해고하진 않겠다고 잠시 물러섰다. 하지만 3개월 뒤에 또 고용불안이 반복될 수 있는데다 여전히 학교 당국은 퇴직자 자리를 “다 채워 줄 순 없다”며 인력 감축도 밀어붙이려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정년 퇴직자 수만큼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최근 학교 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근로 장학금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비용 절감이라는 논리가 노동자·학생 모두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5900억 원 넘는 적립금을 곳곳에 쌓아 두고 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학생·노동자에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과 노동자의 문제는 서로 맞닿아 있다.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즉각 인력 감축과 해고 위협을 철회하라.

김태양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연세대모임 회원



르노삼성 파업

구조조정 내세워 임금 삭감 말라

정선영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말을 넘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임금이 줄어 온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사측이 또다시 실질임금을 억제하려는 데 항의하고 있다.

르노삼성에서는 2017년부터 생산량과 더불어 잔업·특근이 줄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돼 왔다. 반면 사측은 매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뽐내면서도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2년 연속 동결하려 한다. 또 젊은층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만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 기본급에 산입하는 식으로 법만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맞서 부산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0~31일에 전면 파업을 했다. 노조는 1월 2일에 복귀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시간 끌기만 하자 1월 3일(금)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서거나 생산 속도가 크게 느려지는 효과를 냈다.

이정덕 르노삼성자동차노조 대의원은 파업 분위기가 좋았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조합원들이 두 개 조로 나뉘어서 각 공장별로 라인 투어를 했어요. 라인이 다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조합원들도 기본이 좋지요, 우리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이 합시다’, ‘같이 갑시다’ 하고 말했어요.”

지난해 연말, 일부 노동자들은 국내외 노동운동의 ‘피켓라인’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피켓라인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직접해 대체 인력 투입을 저지하고 파업 동참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12월 27일 도장부의 한 지역구(선거구) 노동자들이 팻말을 들고 파업 참가 호소 활동을 벌였다. 이 소식이 번져 나가면서 30일에는 8개 가량의 선거구로 행동이 확대됐다. 이런 노동자들의 열기가 연초 파업에서도 유사



“주주 배당은 1550억 원 하면서 노동자 임금은 삭감돼 왔어요” 2019년 12월 30일 부산 공장 앞 파업 집회

한 방식으로 일부 이어진 것이다.

1월 3일과 7일에는 전국 10개 사업소에 흩어져 있는 영업지부 노동자들도 파업을 했다. 자동차 서비스와 정비를 담당하는 영업지부 노동자들도 임금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한다.

김준규 르노삼성자동차노조 영업지부 대의원은 말했다. “서비스 쪽은 기본급 자체가 생산직보다 적어요. 잔업 특근도 없어서 연봉이 1500만 원 정도 더 적어요. 인원도 780명 정도에서 430명 정도로 줄었는데, 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 뒤집어 버리자’는 조합원들 목소리가 큼니다.”

인력 감축 압박

르노삼성 사측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다. 최근 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 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구조조정도 압박했

다. 현재 운영되는 주야 2교대제를 주간 근무만 하는 1교대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정규직을 대규모 전환배치하면서 수백 명을 정리하겠다고 한다.

사측은 한 해 20만 대 수준이던 생산량이 2020년에 12만여 대로 줄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에는 5500여 명 가량이 차량 11만여 대를 생산했다. 현재는 인원이 40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동안 노동강도는 악명 높을 정도로 세졌고 산업재해도 해마다 증가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된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이 높다. 정종훈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장은 “사람들 내보내지 말고 오히려 더 충원해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측은 ‘파업하면 구조조정, 전환배치 1순위’라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간사하게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파업 참가율을 떨어뜨리고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임금 투쟁은 포기하고 파업에서 발을 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경험은 임금·조건 양보가 결코 고통의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가령,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한국GM 등에서 노조 지도부가 임금·조건을 양보했지만 그것은 일자리를 지킬 대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측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 대규모 인력 감축의 칼을 빼들었다. 악마에게 손가락 하나를 내주면 몸통을 요구하는 법이다.

지금 투쟁 대열에서 이탈한다고 나만 앞으로 구조조정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단결이 흐트러지고 투쟁이 약화되면, 사측이 물량 감소를 이유로 인력 감축을 감행할 때 이에 맞서는 데도 어려움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설사 나 하나만은 소나기를 피한다 해도, 계속되는 고통 전가와 양보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단호하게 저항할 때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지난 수년간 “양보한다고 얻는 것 없다”는 것을 직접 체감해 왔다. 양보를 할수록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줄었다. 호봉제도 폐지됐다. 임금피크제도 타 작업장보다 더 이른 54세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노동자를 쥐어짠 결과 사측의 배만 불려 왔다.

연대를 확대하자

일부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우리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하고 말한다. 지금 하고 있는 기습적 부분 파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측도 이에 대처하려 할 것이다. 사측이 강경한 자세를 지속하면, 다시 전면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고 피켓라인 등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르노삼성 파업이 벌어지자 사장들의 신문인 경제지들과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비

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연말 이들은 파업 때문에 협력업체가 망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 하청업체는 르노삼성이 위탁 제작하던 낫산 ‘로그’의 부품을 만들던 곳인데 로그가 단종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영 위기의 책임을 엉뚱하게 노동자들에게 돌린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양 호도하려고 그런 보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

은 반대다. 오히려 르노삼성 노동자 투쟁은 더 열악한 하청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 요구를 하는 데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원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하청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주들이 웬만해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강하게 달려든다.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끼리 싸우자’는 식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투쟁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지지·연대를 광범하

게 모아서 대응하는 게 승리로 나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의 공감을 일으키며 연대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

지난 연말 현대중공업 분과동지연대회의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활동가 조직들(노동자의 힘, 더불어 한길노, 노동자연대 기아차 모임)이 르노삼성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르노삼성 투쟁이 자기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불만과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좌파

활동가들이 이런 연대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최근 한 집회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르노삼성을 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런 만큼 현재의 르노삼성 투쟁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와 연대를 표명해야 한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임금과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소속노조와 상관 없이 지지와 연대가 조직돼야 한다.